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조규형
제외동포재단 이사장·전 주 브라질 대사

북한이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가끔씩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북한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보여준 장성택의 처형은 또한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국내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장성택이 중심적 역할을 해 왔으며, 이는 김정일의 뜻이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 김정은은 왜 자신의 멘토 역할을 해왔던 고모부를 제거해야 했는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작년 8월에 있었던 장성택의 중국 방문에 대비되는 올해 5월 최룡해의 중국 방문이다.

중국의 장성택에 대한 환대는 국가 정상급에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 이후 장성택이 추진하여 왔던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같은 중국과의 경제협업은 그대로 진전을 보여

북한 왕조,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가?

왔다. 북한의 자원개발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도 확대되어 왔다.

이에 반해 최룡해는 중국방문 시 환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질타에 가까운 불만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국이 자신들의 세계전략 선상에서 테크노크라트 출신의 장성택을 더 선호했을 것으로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다음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당국이 발표한 장성택의 죄목 리스트다. 작게는 마약, 여자 등 개인의 품행에서부터 크게는 쿠데타 음모까지 나열되어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외국과의 경제 관계 추진에 있어 실책이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다름 아닌 중국이다. 장성택의 몰락에 중국 변수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군부가 핵무기 포기과 대외개방을 종용하는 중국의 후광을 업고,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을 장성택을 공개 보았을 리 없다. 그의 처형이 단시일 내 이루어진 것도 흑을지 모를 중국의 개입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최룡해 일파의 압박에 마지못해 장성택의 처형에 동의했는지, 아니면 장성택과 최룡해, 그리고 중국이라는 삼각 커

넥션의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껴 주도적으로 고모부를 제거했는지는 훗날 역사가 밝혀줄 일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김정은이 보고 듣는 것은 전적으로 군부에 의존하게 될 것이니, 김정은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그 누구에 의해 조정되던 북한 내부 정세의 불안전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북한사회 균열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이 장성택의 죄목을 길게 나열한 것은 김정은을 고모부마저 처형한 패륜아로 만들지 않기 위한 고려이었으나, 역설적으로 이는 오늘날 부패한 북한 고위층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반사회적 범죄들을 낱알이 밝힌 결과가 되었다.

허가와 빈곤에 지친 주민들은 이런 범죄들이 장성택 한 사람 만에 의해 저질러졌을 것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그가 사라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을 리도 없다.

앞으로 북한은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더욱 고립되어 갈 것이다. 그러면 외국 기업이 어디로 뿔지 모르는 북한 당국과 협력을 논의하고자 할 것이며, 미국 관광객 체포 여파로 관광산업도 위축될 것이다. 또 북한 내에서도 장성택에게 썩어진 죄명으

로 보여 점차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외국과의 협력률 적극 추진할 용기를 낼 관리가 어디 있겠는가?

이제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소위 사상적 순수성이 강조되고, 강경론만이 살아남는 집단사고(Group Thinking)가 지배하는 사회로 될 수밖에 없다. 역사에서 집단사고가 지배하는 국가가 멸망에 이른 예는 얼마나 많은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우리에게 중차대한 과제를 준다. 대외 도발을 통해 국내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 강경론자들의 모험주의에 대비해야 하고, 미국·중국을 위시한 주변 우방국들에 대한 능동적인 외교의 중요성도 두말할 필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통일을 이룬다면 아닌 현실적인 국가과제로 인식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을 이룬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은 ‘우리는 통일의 분이 조금 열렸을 때 재빨리 그 안으로 뛰어들어 통일을 실현하였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그럴 용기가 있는가?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은 자문해야 할 물음이다. 북한의 붕괴가 자동적으로 통일로 연결되는 것은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칼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김근모
미래이동병원장

한 진단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증상을 듣고, 아픈 부위를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네 가지 진찰에 의존적인 판단 및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한 직관을 더해 최종 진단한다.

하지만 정보통신 장비를 통한 원격진료는 듣고 보는 진찰밖에 할 수 없다. 속이 더부룩한 증상은 심근 경색증 초기에 가장 흔하다. 이처럼 환자가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와 실제 병명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구별이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원격의료의 확대가 동네 의원과 중소형병원을 붕괴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원격의료의 활성화되면 경쟁에서 유리한 대형병원들로 환자가 집중될 것이다. 원격의료만을 위한 대형의료기관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다. 자연히 동네의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원격의료제도가 오히려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체계에 위협을 빠뜨리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의 대폭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의 허용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기획재정부는 의료와 다른 사업을 연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호접업 허용, 원격의료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국민건강증진 목적이 아닌 의료 민영화를 통해 대형차본들의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원격의료 제도가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신체는 나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많은 기능들이 존재한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지만 나를 쉬어주면 대부분 해결된다. 그러나 대형차본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의료 체계에 원격의료의 적용되면, 사소한 불편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해결하려 들 것이다. 의료비 상승은 불을 보듯이 번번히, 이렇게 증가된 의료비용은 기대자본의 수입이 될 뿐이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 장비를 이용하므로 한곳에 환자 진료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쌓이는데, 이 정보들의 관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 진료 기록이 누출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것이다. 또 축적된 의료 정보들이 건강식품이나 보험과 관련된 사업에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진단과 처방

은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IT 장비업체와 의사, 환자 간에 그 책임소재를 놓고 의료 분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이미 환자와 의시간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두 나라의 의사 밀도는 100km에 1명으로 우리나라 98명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것이다. 의사 밀도 세계 2위인 우리나라가 접근성을 이유로 반쪽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나라와 비교해도 의료 접근성이 아주 높은 편이다. 2010년 OECD 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우리나라가 12.9회로 OECD 평균 6.5회에 비해 2배나 높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창조경제의 한 예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급 여 자수가로 인해 한계에 이른 현 의료보험 체계에서 원격의료는 보험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부 대형차본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주고, 기존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묘한 정책이 과연 창조경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고

충장축제, 10년의 결실 맺었다



노희용
광주시 동구청장

그러나 1990년대부터 시작된 외곽지역 대규모 택지개발로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위축되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게 된다. 여기에 2004년 광주광역시청 이전과 2005년 전남도청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도심공동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재개발을 추동하는 한편, ‘문화의 힘’을 통해 다시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고자 소프트웨어 전략의 일환으로 2002년 충장축제 개최를 모색하게 되었다.

동구는 학계의 권위자들과 축제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외 유명축제장의 장점을 모으는 벤치마킹에 몰입했다. 이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 당시에는 흔치않던 거리축제를 개최해 보자는 것이었다. 광주의 충장로·금남로가 한때 서울의 명동에 비견될 만큼 젊음과 낭만의 거리로 각광받았다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마침내 2004년 10월 전남도청 앞 광장과 충장로·금남로 일원에서 역사적인 제1회 충장축제가 개최되었다. 이후 충장축제는 2010년 문화·관광 유망축제, 2011~13년까지

3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에 선정되는 등 해를 거듭하면서 양적·질적 성장을 이뤄 왔다.

올해 ‘추억 & 힐링’을 주제로 펼쳐진 제10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관람객들이 직접 축제의 주제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행사와 남녀노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재미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로부터 ‘광주 대표축제답다’는 호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평가에서 대표 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완성도, 축제 소재의 특색성·매력성, 타 축제와의 프로그램 차별성, 특색 있는 참여·체험 프로그램, 축제발전성 및 성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거리퍼레이드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충장축제 거리퍼레이드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다.

충장축제는 올해 7개 부문 64개 프로그램이 5일 동안 도심 복판 ‘차 없는 거리’에서 문화난장 형식으로 펼쳐졌다. 유치원생들의 재롱잔치부터 전국학생 사생·백일장대회 등 부문별 행사와 함께 창작공연 콘텐츠 경

연, 전국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문화예술로 하나 되는 일체감이야말로 충장축제가 지향해 가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이는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실한 증거이며 광주가 꿈꾸었던 대동세상이 문화의 풍요로움으로 새롭게 꽃 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희망적인 것은 충장축제가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 전국을 대표하는 최우수축제로 발돋움하게 됐다라는 점이다. 동구에서는 외지관광객 유치, 도시재생과 연계한 상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보완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축제의 전국화 세계화에 근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 온 충장축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또 다른 문화콘텐츠로써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우뚝 설 날도 이제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社說

복마전·부실로 얼룩진 영산강 살리기사업

영산강 살리기 1공구 사업 과정에서 발주처인 전남도 공무원과 감리자-시공사-하도급업체가 한통속이 돼 뒷돈 수수, 공금 횡령을 하는 등 비리 복마전 연 비리 혐의자만 공무원 4명, 감리자 7명,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관계자 22명, 자격증 대여자 10명 등 43명에 이른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공사인 G건설 대표 A(62)씨는 회사 공금 6억 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쓰고 공무원, 감리자 등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소장들은 공무원과 감리자들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하도급 회사로부터는 공사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또한 공무원과 감리자들은 명절, 휴가 때와 설계변경, 기성신청 등 공사단 계약별 직급에 따라 100만~200만 원씩 상납을 받았다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공구 사업은 이러한 비리 고리에 따라 부실투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가 수중에서 이뤄지는 탓에 부실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뒷돈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줬다는 것이다. 1공구가 설계·시공·보수는 물론 수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성한 부분이 없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동안 비리를 뿌리 뽑았다고 약속한 전남도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전남도가 영산강 사업지원단을 해체하면서 감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도 의혹의 소지가 다분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엄히 처벌해야 하며, 다른 공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비리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와 감리 및 하도급업체는 공공부문 입찰에서 철저히 배제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 비리 근절은 법·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신안군, 투자유치 해놓고 나몰라라 해서야

신안군의 신뢰성 없는 행정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군이 민자유치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했다가 뒤늦게 정부가 국가산업으로 추진하자 민간투자자와의 협약을 파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일로 인해 군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신규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에 따르면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가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신안군이 패소했다고 한다. 이 소송은 흑산도 소형공항 인근 군유지를 신안군이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도 소유권을 이전에 주지않아 진행된다는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는 지난 2010년 이 부지의 매입 대금을 완납했지만 군이 소유권 이전을 해 주지 않았다. 신안군이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직접 돈을 들여 공항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신안군은 이 기업과 지난 2009년 3월 민간공동투자방식으로 흑산도공항을

세우겠다고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군은 국가에서 공항 건설을 하겠다고 하자 민간투자자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것이다. 더욱이 땅값이 오를 것을 우려해 매각한 땅마저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다. 반면 신안군의 말만 믿고, 30억 원을 들여 공항과 호텔 건설을 위해 인근 땅을 사들인 기업은 애만 태우게 됐다.

지자체 성공경영의 사활은 투자유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마다 투자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실정이다. 투자유치에 있어도 무책임한 행정으로 민간투자자를 기만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일반적으로 파기한다면 그 어떤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찾아오겠는가.

신안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사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無 等 鼓

2013년이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2013년 올 한해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대중문화계에 불어 닥친 ‘복고 신드롬’의 바람은 여느 해 보다 거셌다.

지난 2011년 큰 흥행을 기대하지 않았던 영화 ‘씨니’의 흥행으로 시작된 복고풍은 올해 안방과 스크린에 몰아쳤다. 특히 tvN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문장마다 ‘응답하라~’가 붙는 유행어를 만들어 시청자들의 열광을 받았다. 지난 10월부터 안방극장을 찾은 이 연극극장을 찾은 이 연

고, ‘올드보이’도 개봉 10주년을 기념해 재개봉했다.

가요계에서는 들국화가 4집 앨범으로 팬들을 찾았으며, 가장 조용필은 10년만의 신보 ‘헬로’를 내놓았다. 이들은 아날로그의 정서를 한껏 자극했으며 이미 고인이 된 김광석, 김현식도 재조명 됐다.

이처럼 복고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세대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중년층이다. 이들은 대중문화의 황금기에 있던 세대들로 ‘X 세대’로 불리며 기성 세대와 차별화 됐다.

그러한 이들이 이제 대중문화의 새로운 소비 주류로 부각되고 있다. 20대 보다 안정된 경제력, 시간적 여유까지 더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간들을 되돌아 보게 되면서 복고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계의 복고 신드롬은 과거의 옛 향수를 추억하며 힐링을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 떠돌고 있는 공안정국이나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 등 민주주의를 역행하며 암울했던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복고바람은 불어서도, 재현해서도 안 될 것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문·매일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점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점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국유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